

# “올해 폐기물로 인한 화재 9건 중 4건이 군산에 발생”

### 문승우 도의원 “불법폐기물 근절 위한 대도민 홍보 강화해야”

### 방송매체 통한 홍보와 함께 신고 포상금 상향 등 강화책 제시

전북도의회 문승우의원(군산4,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원은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



나 휴경기, 공장용지,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올해에만 9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군산에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북도가 전수조사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은 5만193톤으로 이중에는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에 달하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이 2만 1,029톤에 이르고 있다”며 “투기된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투입이 뻥튀기 때문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도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원은 불법폐기물 근절 홍보강화책으로 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매체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 “공공의대 음모론 ‘가짜뉴스’”

### 이용호 의원 “즉각 중지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약에서 남원 설립을 발표한 것으로,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 (2018.2월 폐교),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이자 이후 두 차원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 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 시적 배정 한 것어서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말(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한 사업 진행 중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 안될 것이다”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광복군 창군 80주년 기념식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광복군 창군 80주년 기념식에서 국방부 4총장단과 한국광복군동지회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립군가 ‘입국학 행진곡’을 제창하고 하고 있다.

## ‘의무적으로 변호사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의 인력풀 확보를’

### 두세훈 도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원주2)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두 의원은 “14년만인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 시행되는 이 법은 과거 3차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놓여온 등에서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미등기 실소유자가 많아 제시행 됐지만 신설된 자격보증인 및 보수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특별조치법은 필수 보증인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의무적으로 1명 포함시켜야 하는 변호사 등의 자격보증인의 확보가 어렵다”며



“자격보증인의 보수제도의 경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현행방식은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미등기 부동산의 잔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시군의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의 인력풀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 검토 촉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비례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건 의했다.

두세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별조치법의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사법위원장 및 위원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조동용 도의원 발의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2월부로 1년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한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에 이어 제2기 특위 활동으로 내년 9월까지 1년간의 추가 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가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 신포탄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에 따라 서남·완주·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완성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특화형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도적 차원의 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조동용 의원은 “지난 1기 특위활동은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문제나 LX드론교육센터 타지형 설립계획 등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2기 활동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정부 압박전술로 최대치의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기능대회 심사위원까지 코로나19 확진

### 101번 확진자 통한 3차 감염 4명 · 도내 누적 환자 113명으로 ↑ A 심사위원, 광명 확진자와 접촉 양성 판정 후 경기도로 옮겨져 기능경기대회 당초 21일에서 3일로 앞당겨 오늘 막 내리기로

전북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 등 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전북 누적 확진자는 11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전주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확진자에서 전파된 감염자가 4명이나 추가됐다.

발생 원인별로는 101번 확진자에게 감염된 이들로부터 또다시 추가 감염된 자가 4명,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남성 1명, 감염경로가 미상인 1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익산 4명, 전주 1명, 군산 1명, 경기도 1명이다.

107번째 확진자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해외 입국자이다.

108~111번 확진자 4명은 101번 확진자로부터 104번, 105번 확진자를 거쳐 3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112번째 확진자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인 A(40대 남성)씨로 최근 전북 익산의 한 학교에서 심사했으며 경기도 광명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증상이던 A씨는 직장 동료의 양성 확진에 따라 지난 11일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6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나와 거주지인 경기도로 옮겨졌

다.

도 보건당국은 A씨는 학생과 접촉은 없었고 도시락을 이용했으며 식당에 갈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113번 확진자(60대 남성)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카드사용내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해 추가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중에 있다.

한편, 전북에서 16년 만에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심사위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조기 폐막한다.

전북도는 당초 21일 폐막하는 기능경기대회를 3일 앞당겨 18일 막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18일과 19일 열리기로 한 경기가 많지 않는데다, 순위 조정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수도권 공공기관 489개, 지방 이전을”

### 김종식 도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16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종식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음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운을 폈다.

특히 “2019년 기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78.9%(20대인 반면, 비수도권은 40대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급감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100대 기업본사의 91%, 1000대 기업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 의료,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 19 역시도 수도권은 그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됐지만 최근 혁신도시도 발전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어 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종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공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 및 출자한 회사 등 489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을 새롭게 추동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며 권역별 총량을 고려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균형과 효율성 있는 정책방향 수립을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김기영 도의원 “시간간 갈등 해결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익산3)의원이 지난 16일 제3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 북도가 시군 간 갈등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것을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도내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시군 간 갈등 문제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전북도가 시군 간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와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균형발전 ·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전북의 미래는?

### 민주 전북도당, 21일 토론회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모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시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의 환영사로 개회한다.

이날 기조 발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소준호 우석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 발전 방향’은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맡는다.



토론회는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광수 우석대 보건의로경영학과 교수, 김택천(사)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성주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고무 잘사는 지역을 목표로 한다”며 “균형발전은 단순히 과밀한 수도권의 분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실현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광역경제생활권 주장이 대두되면서 다른 지역과 경쟁하며 협력해야 하는 전북도 새로운 발전 구상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전북은 새만금과 혁신도시라는 두 개의 발전축을 중심으로 내부의 균형발전도 이뤄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기에 이번 토론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실천과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최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모략한다.

이와 함께 전북의 관점에서 지자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